

낙농자조금 내년 예산안 88억원 확정

내년에 낙농의 날이 신설되고 지역별 우수사랑 캠페인이 확대되는 등 2011년도 낙농자조금사업에 대한 예산안 88억원이 확정됐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11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소비홍보사업 44억 550만원(50.06%),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32억1,500만원(36.54%), 조사연구 3억9,000만원(4.43%), 운영비 4억 7,600만원(5.41%) 등 88억원의 사업예산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사업계획 가운데 '낙농의 날' 행사는 6월1일 세계 우유의 날과 별도로 지정해 낙농인과 젖소·우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낙농인과 관계자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다가가 우유 소비를 홍보하는 지역별 우수사랑 캠페인을 늘리기로 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지침서도 발간하고 도심숙 목장나들이와 방송을 통한 간접 광고(PPL)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1년도 낙농자조금사업 예산안은 24일로 예정된 대의원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승호 위원장은 "낙농가들은 최근 잇단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후변화 및 사료값 인상 외에 원유 생산량도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농가들의 피와 땀인 자조금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유 등 낙농제품 수출 비상

경북 안동 양돈단지에서 7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낙농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에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고 3,000배에 달하는 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고 열처리를 하지 않은

돈육 등의 수출이 금지된다.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그간 중단됐던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이 막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뿐 아니라 최근 중국 시장을 다시 열었던 우유·분유 등의 국내산 유제품 수출도 다시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5월 구제역이 발생한 후 지난달부터 홍콩·태국 등의 해외로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돈육 등은 수출이 금지돼 다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는 수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 국내 축산농가들은 적지 않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IE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최종 발생 3개월 후 얻을 수 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충남 이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돼지가 감염된 것을 감안해 긴장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예고 없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구제역은 감염지역 내 사람이나 차량 등이 전파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경북에서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살처분 요령 등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면서 "축산 분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단백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무기한 담보'

유단백을 도입하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이 각계의 참여한 입장으로 담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낙농진흥회측은 지난 11월 22일 양재동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의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사회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사실상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이 무기한 담보상태에 빠졌음을 밝혔다.

전종철 낙농진흥회 전무는 "생산자단체를 위시한 농가 대표측이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원칙을 무시한 안이며 이 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이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설명회를 통해 나온 기존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업체와 기존의 안이 아니면 안된다는 농가 사이에 첨예한 입장차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 낙농진흥회 부장은 이에 "연구용역결과로 나온 개선안만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면 소위나 이사회를 열 의미가 없다"며 "미래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도입이 시급한 만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측은 연구용역이 시작될 당시의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대상으로 논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낙농가를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토대로 도출한 개선안을 무시하고 유업체 입장만 반영한 개선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원유부족현상 등 급변하는 낙농현장 문제의 철저한 원인분석 없는 편의주의적 행정에 울분을 금치못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 서울우유·매일·남양유업 우유 담합 제재 연내 유력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우유업계에 대한 우유값 담합 제재가 연말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유력해 보인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의 담합조사 이후 과징금액을 깎기 위해 우유값 인하에 경쟁적으로도 나선 바 있어

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1월 19일 "우유값 담합과 관련 지난주에 결재해 제재를 결정할 위원회 상정 전 단계인 심판관리관실에 넘겼다"며 "보통 처장 결재 이후 심판관리관실은 제반 절차를 거쳐 한달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위원회가 열려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장 결재후 현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제출 받고 있다"며 "심판관리관실은 2주 정도 피심인 기업들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필요할 경우 2주 이상 연장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보통 한 달 남짓한 기간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든 소위원회든 위원회에 상정돼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며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위원회 개최 여부는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유의 원유값은 정부·낙농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공적 기구인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낙농진흥회는 당시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고 사료값도 뛰자 낙농가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4년 만에 원유값을 20.5% 인상했다. 그러자 우유업체들은 8월에 제품 가격을 일제히 17~18% 가량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감지하고 올 들어 조사를 벌인 끝에 담합사실을 적발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의 우유업계에 대한 과징금이 상당 규모가 될 것이란 것이 알려지자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우유업계 빅4는 지난 9월 우유가격을 일제히 내리는 해프닝도 연출했다.

이같은 우유업체들의 잇따른 가격인하에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깎아 보자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액보다는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을 감안해 상당액

을 감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유야 어쨌건 유유업체들이 국민의 생활물
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격인하에 나선
부분은 선처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EU FTA 축산 피해 2조 지원”… 농가 “속빈 강정”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큰 피해가 예
상되는 축산 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축산업계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속빈강정 식의 재당, 삼당 대책”이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
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
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해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 분야에 지
원하기로 했다.

한국산 가격의 절반수준인 EU산 냉동삼겹살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부문은 사육환경 개선, 질
병발생 최소화 등을 통해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데 주
력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해 농가 비용
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삼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공제품 개발도 활성화하
겠다고 밝혔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학교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생산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다. 양계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며 육우는 군납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괄공제 5억원
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은 10
억원까지 비교세된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직불금이나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FTA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정부 대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축산농가들을
짓누르고 있는 세제부담 완화책은 극히 미비하고, 생산비
폭등의 근본 요인인 사료가격 안정대책이나 농가부채 대
책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발전기금은 고갈되고, 재원대책이 없는 상황
에서 4대강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타령을 하고 있다”는 비
판도 나왔다. 이승호 회장은 “농가가 이미 죽었는데 장기
적인 체질개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 국제낙농연맹 정회원으로… 정책 의결권 가져

우리나라가 국제낙농연맹(IDF) 정회원으로 가입됐다.

IDF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는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에서 개최된 제98차 IDF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됐다. 2006년 중국 상하이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으로 가입한 지 4년 만에 국제 낙농·유업 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국가가 된 것이다.

문제풍 낙진회장은 IDF 총회 정회원 가입 연설에서
“한국은 세계 낙농산업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DF 낙농
정책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